

국익 추구 과정에서 나침반 역할 하는 '가치'

value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원자력대학원 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국익과 가치에 대하여

모든 국가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사명이기도 하다. 국익은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 각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익을 추구한다. 국익 추구 과정에서 나침반 및 방향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치(value)다. 국가의 이익(interest)이 다분히 현실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면 가치는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다. 국가 정치지도자들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정목표를 설정한다. 어떤 가치를 근본으로 삼아 국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국격(國格)이나 평판이 결정된다.

가치는 이익에 비해 일관성을 갖는다.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범 및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중심을 견지하려면 근본 가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익 추구 행위가 근본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를 포기해선 안된다. 흔들림 없이 가치를 근본으로 삼아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 중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권증진 및 개발원조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다. 최근 필자가 만난 사회주의 국가의 주한 대사는 자유와 인권이 곧 이념(ideology)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자유는 인간이 선협적으로 갈구하는 대상이며 기본권은 불가양의 권리임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가치다. 즉, 가치와 이념을 혼동해선 안 된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역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노선을 살펴보면, 당시 국제환경에 따라 국익 우선순위에 일정한 변화는 있었다. 그들은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근본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변명을 지속 견인해왔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의 국익은 크게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 동포 보호의 3가지로 구성된다. 국토분단과 휴전상태 하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은 국가 안보 및 조국 통일이다. 우리의 힘(국방력)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실현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실존적으로 위협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이다. 이러한 안보 이익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근본 가치를 중심축에 두면서 추구해야 한다. 경제 이익의 경우 경제주체인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업 통제 내지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700만 재외동포는 물론,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인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국민 없이는 국가도 없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든, 사업 또는 여행을 하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결사인 정당은 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근시안적인 당리당락을 일삼는 정당인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 대계(大計)를 제시하는 정당인지를 잘 구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동시에, 지구에서 생활하는 80억 인류는 개별 국가의 구성원(국민)이면서 인류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인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며 공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세계시민 정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세계시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는 국가의 경계(국경)나 국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벽을 높이 세우기보다 다리를 놓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남을 위한 온정과 배려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존중이므로 이를 근본 가치로 삼아서 국익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과 총선 등 각급 선거 시에 자유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근본 가치에 충실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다.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는 이러한 근본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관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인기 영합이나 선전 선동에만 능숙한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도태시키는 것은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社說

광주 군공항 이전,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광주시 1조 원 '통 큰 보따리'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내선) 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전남도의 움직임에 이어 광주시가 '통 큰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군공항 이전도 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안이 지역사회의 이견을 좁히고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1조 원 지원 등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광주 공공기관 이전,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와 훈련시간 등의 조정 등이 담겼다.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5조 7480억 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 원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5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현안이기도 하다. 특히 개항 16년째를 맞는 무안국제공항은 '불 꺼진 공항'이란 지적까지 받으며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항의 수익 구조상 국내선 없이 국제선만으로 활성화한다는 것도 어렵다. 전남도가 세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에 앞서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고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은 더 이상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남비시설'이 아니다. 광주·전남이 상생을 이루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 공항'이라는 가치가 높다. 아쉬운 것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시급한 현안이지만 '반쪽 이전'으로 또 다시 논란을 키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진정성을 담아 무안군도 '섣덕'해 가야 한다. 과연 무엇이 지역의 미래 비전인지 숙고해서 광주시의 '보따리'를 더 크게 만드는 전남도의 고민도 당연하다.

유권자가 부끄러운 선거사범 엄벌해야

전남 단체장 7명 선거법 재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광주지법의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선거사범들이 있다. 그냥 단순한 선거사범도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다. 한 두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만 무려 6명이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도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다. 그는 지난 23일 광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0여 명에게 50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이 아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충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치의 의미는 빠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빠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당선돼야 하는 것이 옳다. 마음 급하다고 찝찝한 일을 벌여놓고 끝내 법정을 들락 달락 거리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 선거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해 지역에 더는 선거사범이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삼월삼진날, 칠월칠석, 구월중양처럼 음력으로 홀수가 겹치는 5월 5일은 선조들이 길일로 지냈던 단오(端午)이다.

단오는 한 해 가운데 양(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한다. 하여 옛 사람들은 설날, 한식, 추석과 더불어 큰 명절로 지냈다. 단오는 천중절, 중오절, 술의, 수릿날, 과부 시집가는날, 미나리 환갑날 등 시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양기가 강해 어떤 일을 해도 탈이 없을 것으로 여긴 선조들은 이날이 되면 여러 가지 풍속을 지냈다. 여자들은 '단오비음'이라 하여 창포 삶은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감았다. 또 창포뿌리를 깎아 붉은 물을 들인 비녀를 꽂기도 했다. 남자들은 '벽사(辟邪)'를 위해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오시(午時)에 목욕을 하면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하여 '물맞이'를 했던 날도 단오날이다. 이날은 수리취를 넣어 둥글게 만든 수리절편과 썩떡·망개떡 등 절식을 먹었고, 그네뛰기·씨름·탈춤·사자춤·가면극 등을 즐겼다.

단오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조선 후기 화단의 이단아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端午風情)'이다.

해원 풍속화의 해학이 넘치는 이 그림은 한 무리의 여인네들이 단오날을 향유하는 풍경을 그렸다. 그림에는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이 그네타는 모습, 가체를 풀어 내린 여인

이 답소하는 모습, 저고리를 벗어거나 가슴을 드러낸 채 냇가에서 몸을 씻는 여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나무 건너 바위틈에는 동자승 두 명이 이들을 훑쳐보고 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단오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여인 해방구 풍경이다.

춘향과 이도령의 러브스토리로 단오날 광한루에서 시작된다. '열녀춘향수절가' 한 대목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때는 삼월이라. 일렀으되 오월 단오일이러다. 천중지가절(단오)이라. 이때 월매 딸 춘향이기도 또한 시서음율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 소냐. 추천(그네뛰기)을 하려고 향단이 앞

세우고 내려올 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땅아 금봉채(금으로 봉황을 새긴 비녀)을 정제하고 나군(얇은 비단 치마)을 두른 허리 미양의 가는 버들 힘이 없이 드리운 듯 아름답고 고운 태도 아장 걸여 흐늘 걸여 가만가만 나올 적에...'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춘향이 단오날 규방에서 나와 삼단 같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그네를 타면서 글방 이도령과 가연을 맺는다. 단오가 맺어 준 천생연분이다.

500년 전통 법정포단오제가 지난 주말 열렸다는 소식이 지면에 실렸다. 지금은 쇠락해 일부 지역에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단오는 대동놀이를 통해 삶의 고단함을 함께 이겨내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